

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44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2. 23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약칭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정부조직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대전광역시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시”를 “대전광역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 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 - - - <u>대전광역시</u> -
제2조(수당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<u>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</u> 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	제2조(수당) ① - 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 - - - -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. 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<u>시</u>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	② <u>대전광역시</u> - - - - - - - - - - - -

관계법령

정부조직법

[시행 2008.2.29] [법률 제8852호, 2008.2.29, 전부개정]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·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9조 (행정안전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, 법령 및 조약의 공포, 정부조직과 정원, 공무원의 인사·윤리·복무·연금, 상훈, 정부혁신, 행정능률,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, 정부청사의 관리, 지방자치제도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·재정·세제, 낙후지역 등 지원,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, 선거, 국민투표,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·민방위·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부칙 <제8852호,2008.2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

[시행 2008. 2.29] [대통령령 제20741호, 2008. 2.29, 폐지]

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<제20741호, 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.

2.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

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9년 3월 13일
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2월 23일 대전광역시장
2. 회 부 일 자 : 2009년 2월 24일
3. 상 정 일 자 :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(임시회)
제2차 행정자치위원회(2009. 3. 13)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정하운)

1. 제안이유

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약칭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III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박춘용)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수당지급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,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며, 변경된 법령입안기준에 맞도록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IV. 토 론 요 지 : 생 략

V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VI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